

'3무 용자지원', 위기의 소상공인에 단비

광주시, 3차례에 걸쳐 2만6309개 업체에 6571억원 용자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현장에서 만족도 높아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담보, 이자,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이른바 '3무(無) 용자지원 정책'이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1차, 10차, 11차 민생안정대책 등 3차례에 걸쳐 3무 용자를 지원했다. 모두 2만6309개 업체가 6571억원 용자를 받았다. 제1차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으로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원을, 제

10차 민생안정대책에선 2884개 업체에 500억원의 용자지원을,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민생안정대책에선 5076개 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용자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 3무 용자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3무 용자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7.93%에 이르렀다. 3무 용

자로 지원받은 대출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임차료 납부가 31.82%로 가장 많았고, 상품매입 24.69%, 인건비 17.14% 순이었다.

광주 서구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자필 편지를 보내와 3무 용자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소상공인은 편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관련 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에서 맞춤형 특별보증대출을 해주신 것과 관련한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실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주 소상공인 특별주간

을 맞아 방문한 소상공인 영업 현장에서도 3무 용자 정책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어졌다.

조선대학교 장미의 거리의 한 업소 대표는 "코로나19로 폐업의 기로에 서있던 상황에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해준 3무 용자로 다소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확대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한 주간 소상공인 현장을 둘러보면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지원이 절실한 지 새삼 확인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금리 인하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용자사업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용자하는 제도다.

용자 대상은 국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는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 인증 업소다.

용자는 소외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용자한 도액은 식품 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00만원이다.

용자는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6년 이내(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은 4년 이내), HACCP업소는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용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광주시, 내년 12월까지

광주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나 사·도 또는 서울소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및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및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료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다.

지난 11일 기준 광주시 3건, 동구 15건, 서구 16건, 남구 4건, 북구 19건, 광산구 4건 등 총 61건이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 세력 관련 사건(12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9건) 순이다.

김용만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이번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후 위기 대응 '시민 실천의 날' 지난 13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21 기후 위기 대응 '시민 실천의 날' 행사에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지구 공동체 공존을 위한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지원 총력

학계·연구기관 등 TF 첫 회의 기획 연구용역 자문 및 과업제시

광주시가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를 위한 기획 테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지원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고자기장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TF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순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조영달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용민 단국대 물리학과 교수, 이영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광주센터장 등 12명이 참석했

고, 위원장으로는 문원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선출됐다.

광주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유치 계획을 발표한 뒤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 및 유치를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매월 2차례 기획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순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시가 2012년부터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광주 유치의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지스트 교수는 "지난 2012년 광주시 고

자기장연구소 설립 기획연구 참여자로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 학문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향후 기획 연구에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주 센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획 보고서 등 예타 준비를 위한 기간이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원진 위원장은 "고자기장 연구소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설립의 방향은 광주에서 담을 것을 충분히 담아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측면에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투기 의심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전남도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12일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 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제징수에 통보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